(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58 western

VISION 8

지역발전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끌고가는 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27 지방경제 살려, 국가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지원체제 정비'

-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설치 지원(10년간 약 3,300만㎡)
- 허브 지방대학 집중지원, 특화산업 추진
-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 광역경제권별 특성화 개발 지원
- 지방에는 재정지원 확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
-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28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사갑니다'

-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 연기금 등 지방으로 자금 환류
- 지방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 우수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 향토산업 발굴을 위한 향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추진

29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수도권'

-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 거점 조성
-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차별 폐지
-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합리화
-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개선

30 도시서민 삶의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을 으뜸으로'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대자금의 저리융자
- '도시 3안(三安) 정책' 강화
- 서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택분양가 10% 인하,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VISION 8

지역발전

목표 27

지방경제 살려, 국가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지원체제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관한 감독·관리 권한은 지방분권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그린벨트의 해제·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글로컬(Glocal) 21시스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동·환경·토지이용·교통 분야 관련 자율권 부여와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역별·소득계층별 등 다양한 주택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택용지 공급 확대를 위해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62 western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설치 지원(10년간 약 3,3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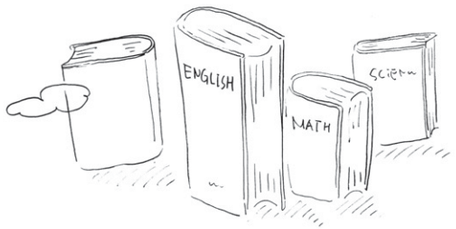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기업의 육성 및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리의 산업용지를 지방에 직접 공급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중앙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회생·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특화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집적)를 촉진시키고,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전환촉진계획'에 따라 '지역전략업종·단지조성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가 공동지원하겠습니다.

허브 지방대학 집중지원, 특화산업 추진

지방대학은 각종 국책사업(BK21, NURI 등)을 통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재정여건 취약 및 졸업생의 취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해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대학 지원·육성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한 차별화된 지원·육성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 264 western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 지정 · 확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3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투자와 인센티브가 미진하여 외국기업을 활발하게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개발계획수립 및 집행, 외국기업 유치, 재정투자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위주로 조성 ·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집행 및 관리, 중앙 협의 등의 참여 실적에 기초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제공항, 항만과의 접근성 제고,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현재 분담률보다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 **외국투자 촉진을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등 세계적 경제자유구역 수준을 능가하는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구한다고 하면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실적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 2 수준으로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자체로 과감하게 이관시키겠습니다. 이관 시에는 지자체의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요 재원과 인력을 동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국가의 일방적 위임, 포괄적 지시 감독 등 중앙 편의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부처별 기관위임 사무를 자치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할 경우 소요 인력과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분권 관련 의사결정체제를 일원화하고 산업,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속하게 이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 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의 치안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 지역경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66 western

비, 지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치경찰을 도입하되 광역경찰의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현행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증액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없는 지역별 차등 지원은 물론 권력층의 시혜성 지원금으로 논란이 되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포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 관급공사 및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과 비리 등이 지역마다 일부 남아 있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착비리와 유착, 예산낭비, 정실인사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68 western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과학기술 인프라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산업발전의 중추 기반입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분원, 지방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설립, 유치하여 이들 간에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학기술 거점 및 R&D 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별 특성화 개발 지원

지방의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광역경제권을 형성·발전시켜야 합니다.

■ **광역경제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단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각종 광역적 사업을 발굴하여 권역 내 특성화 발전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의 산업·교통·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에는 광역경제권 특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70 western

지방에는 재정지원 확대,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확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은 여전히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도권도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산업자본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지방세원을 확충해서 지방재정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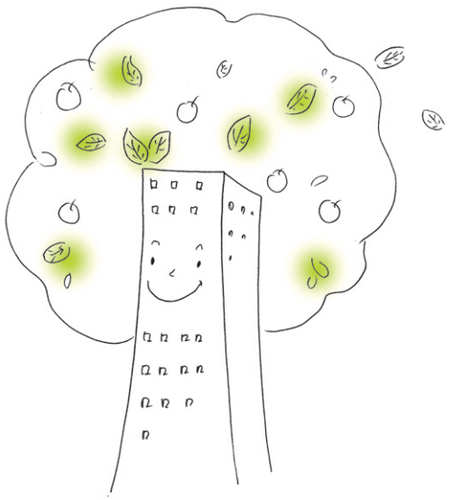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지방경제 발전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로 인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급증문제도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가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책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에 고가의 아파트의 공급초과현상으로 인한 과중된 세부담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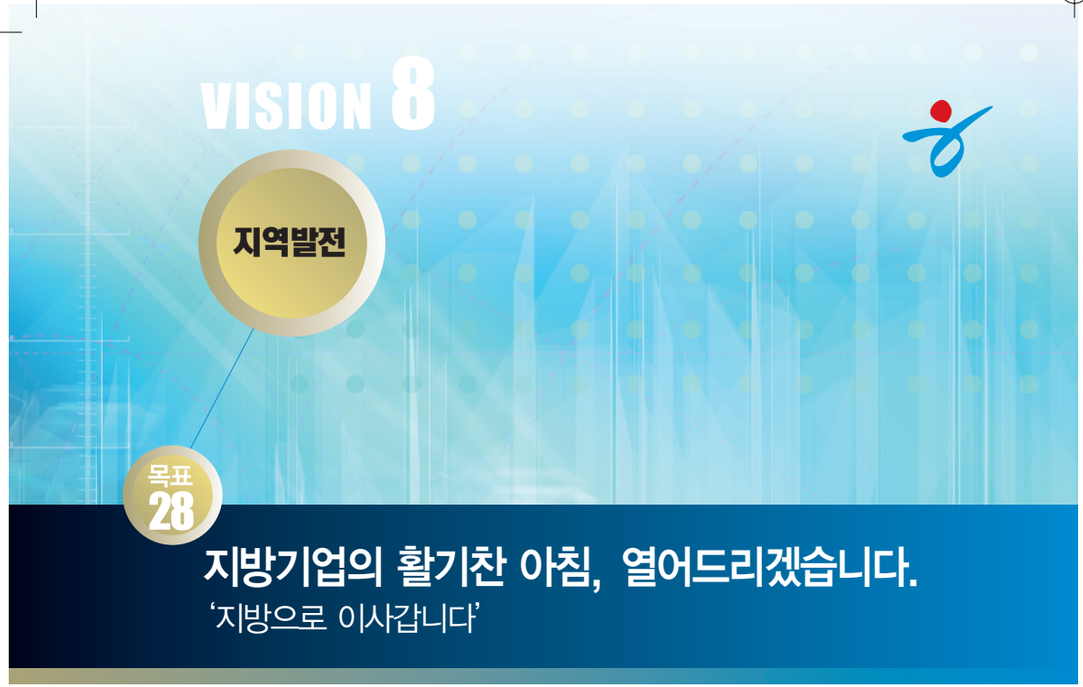
- 지방 미분양아파트 또는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 부담 완화 및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민간택지와 동일하게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 소재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 272 western

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임대사업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역시 및 지방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이 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고 분양가 인하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대폭 확대, 연기금 등 지방으로 자금 환류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이 육성되도록 각종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에 별도로 금융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국내 레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골프수요에 지방이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감세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기업 중 기술개발(R&D) 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기업을 정책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상업금융으로부터 투·융자 및 보증을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빠른 시일 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 276 western

지방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기업들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수요자 지향형 원스톱서비스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1개 기관 방문으로도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지원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으로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이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제도

지방산업단지의 일부는 분양률과 가동률이 낮고, 쇠퇴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자금지원 및 규제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투자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재정지원,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역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를 통해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일괄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시·도지사가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조치의 차별화로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대물량 대기로 주택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를 매입,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주겠습니다.

■ **지방소재 기업의 용지난 해소를 위해 투자 단지를 국가조성형 장기·저가의 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자금력이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78 western

부족한 지방기업의 용지수요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지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발굴을 위한 향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지역별 주요 특산품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향토산업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향토산업발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 지자체 주도의 향토산업(문화·공예)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농공단지 등을 향토산업 관련 중소기업 위주로 특화 육성하고,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토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요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산재해 있는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밀착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 혹은 영세 규모 향토산업 기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단위에 지자체·관련단체 및 지원기관의 협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추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지원을 넘어 각 지역별 상권을 중심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산업·관광시설 등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 구역단위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세계적 거점 조성

수도권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업혁신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적 도시여건을 활용하여 금융, 유통, 비즈니스, 디자인, 컨벤션,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활동이 이뤄지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 기존의 거점에 추가하여 소규모 거점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신산업분야의 기업유치특구를 조성·육성하고 인적자원의 교육 및 연수기관을 대규모 유치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업종별 기업유치특구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 및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82 western

■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성화 발전특구법」에 의해 '혁신산업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특구마다 특색있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닌 신산업 특화집적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차별 폐지

수도권 경제특구를 비롯 정부가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다소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적인 사항에 대해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기업보다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구에 유치되는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해 규제적용이나 행정 · 재정 지원에 있어 차별조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개축 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 및 행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 284 western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합리화

수도권에는 권역별로 엄격한 행위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위규제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며, 이런 규제들은 최근의 여건변화와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권역구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읍면단위의 인구와 산업집중도의 변화를 파악한 뒤, 규제의 적용범위를 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합니다.

- 현행 권역별 규제를 소규모 단위의 지역 분류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 관련법 및 제도간 상호충돌과 중복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이상의 규제나 중복 규제는 비용에 비해 규제효과가 낮아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연보호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행위규제를 통하여 수도권 전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보호권역에 일정 수준의 관광 및 레저시설을 설치,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연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전 위주의 자연보호구역에 친환경적 관광 및 레저시설 개발을 적극 유도하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개선

수도권 내의 출퇴근 및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행시간이 길어도 1시간에 가능하게끔 '1시간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경춘선, 신분당선, 수인선, 분당연장선 등의 광역철도와 경전철을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BTL, BTO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자유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 기간교통망의 건설과 도심도로의 재정비 및 지하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교통망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하여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도로 설치, 자전거이용 고도화 등 인간 중심의 보행체계를 동시에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낮아지고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VISION 8

지역발전

목표 30

도시서민 삶의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을 으뜸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대자금의 저리융자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임대료도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수도권의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 결손가정, 실업가정 등 최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정부가 최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임대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 임대보증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증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 288 western

'도시 3안(三安) 정책' 강화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 권역으로 삶의 질 개선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 주민들은 3가지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대처가 필요합니다.

■ 첫 번째는, 안전정책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축소해나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터의 확보나 응급환자의 급송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정책의 예로 수도권 광역적 교통안전체제의 정비, 고층빌딩 생활에 대한 안전 정보의 전파와 위험의식 강화, 안전한 환경개선 정책 등이 있습니다.

■ 두 번째, 안심정책은 흉악범죄, 유괴범,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이 없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정책입니다. 범죄 양상과 종류에 따른 치안태세의 정비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 치안협의회 구성, 대도시권 및 국제화되는 특수범죄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 안전한 이웃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 세 번째 안정정책은 일자리 안정, 여유롭고 안정된 가정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저소득층에 대해 고급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주민과 봉사조직을 활용한 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는 가정이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서민밀집지역의 경우 각종 범죄로 인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 도시 지역 서민층 밀집거주지역을 선정하여 여성이 만족하는 수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의 물리적 환경정비를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며, 주거개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첨단 카메라를 부착한 어린이 안전점검장치(U-monitoring)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과 주거개선을 통한 서민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FQ)08한 나라 본 책(258~291) 2008.3.29 5:21 AM 페이지290 western

주택분양가 10% 인하,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우리나라 도시용지의 절대부족(전국의 6.2%)은 도심지 내에 택지공급이 택지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도심지 내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는 곧 서민들에 대한 주택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여, 관리지역 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 수준으로 늘려 택지를 둘러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15~25% 낮추고, 추가적으로 택지비를 20% 가량 하향 조정시킴으로써 전체 분양가가 10% 정도 더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공공택지 산정원가 기준의 개선, 용적률과 녹지율의 조정, 공공과 민간간의 경쟁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